

“전라감영 객사권역 빈 점포 속출”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 시정 질문서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안 검토 중 기존 구도심 빈 건물 활용 방안 강구”

김윤철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원은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동문 상업가와 농남 일대를 비롯한 전라감영 객사권역 등 해당 지역의 상가 활성화 대책 및 빈 점포 속출사태에 대한 전주시 행정에 대해 질의했다.



후 현재 6개월이 넘게 경과했음도 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건물주와 세입자 측면에서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전주시 행정의 고뇌에 찬 처방전은 무엇이며 규제완화의 범위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전문가 자문 및 타 지역 사례조사 등을 통해 역사성과 장소성을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2016년 12월 ‘전주시 지역상생협력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식을

위한 상생협약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구도심 빈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시는 “상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 및 타 지역 사례조사 등을 통해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당초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종 규제 완화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최근 한옥마을의 활성화를 매개로 상업화와 산발적 개발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역사도심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는 등 구도심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며 “따라서 전주시는 구도심의 역사문화자원 및 미래유치의 복원과 보전을 통해전년 도시에 걸 맞는 역사상과 전통성의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시는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감영객사 및 동문거리 권역에서만 허용하지 않았던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꼬치구이 등과 일식·중식 등 외국계 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해 다른 권역과의 형평성을 맞추었고, 프랜차이즈 본사 및 본부가 전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권역에 입지를 허용하는 지역업체 배려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시는 “앞으로 변경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전주시 도시건축공공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경에 변경 결정·고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획이 ‘구도심 백만평 문화심장터’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나눔·소통의 생활문화축제

내달 12일 전주종합경기장서 ‘야호시장’ 개최

전주시가 나눔과 소통의 생활문화축제이자 시민장터인 첫 번째 야호시장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10월 12일 낮 12시 전주종합경기장 수영장 앞 주차장 부지에서 ‘제1회 전주시 야호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호시장’은 벼룩시장과 프리마켓, 장터 등을 모두 아우르는 전주의 브랜드 네임이다.

시는 이번 야호시장의 슬로건을 ‘2019 야호시장, 맘껏 웃음꽃이 피다’로 내걸고 시민 누구나 참여해 즐기고,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민장터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한 프리마켓 위주보다는 환경·공유·나눔·청춘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플리마켓 분야 50개 팀 △체험교육 분야 50개 팀 △아나바다(어린이 중고장터) 20개 팀 △문화공연 분야 15개 팀이 참여해 야호장터를 구성하게 된다.

먼저 플리마켓의 경우 전주시에서 활동중인 온두레공동체와 사회적경제조직, 시민 셀러가 참여해 직접 제작한 생산품을 전시 판매한다. 시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플리마켓 참여자들의 판매금액의 일부를 자율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체험교육 분야의 경우, △페이스페인팅 △재활용품 활용 리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소규모 수공예품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시는 가족단위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린이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경제활동과 재활용

의 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또 재능기부를 통해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청년공연단을 모집,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즐거움을 선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가정 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현장에 가지고 나와 기부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부한 물건 중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는 형태의 ‘나눔과 물물교환 부스’도 운영한다.

야호시장 부스운영은 공동체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참여들의 참여도 가능하며, 오는 19일까지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부스 운영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올해 행사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내년에는 더욱 풍부하고 만족도가 높은 야호시장을 준비할 계획이다. 동시에 야호시장 운영하고자 하는 공동체와 일반시민들에게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개설 장소의 확보 등 야호시장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야호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야호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전 부치며 환하게 웃는 해바라기 봉사단

5일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해바라기 봉사단 관계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명절음식 나눔 행사를 실시한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전을 부치고 있다.

‘온라인상 자살 유발정보 근절’ 전북경찰, 유관기관 간담회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북정신건강센터에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에 따른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한민국의 자살자수는 1만2463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24.3명으로, 이 가운데 전북은 2017년 자살자는 524명,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23.7명으로 전국에서 2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현재 ‘자살 예방’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자살예방법’은 온라인상 자살동반자 모집 및 자살 방법 공유 등 자살 유발정보에 대한 처벌근거 미비로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할 개정안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개정안 시행일부터 온라인상 자살 유발정보 유통자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뉴스

전북청 112상황실과 간담회

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 중앙지구대는(대상 권기홍) 주민 치안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방문한 전북청 112 상황실 직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장 근무자들과 112 업무 전반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과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권기홍 중앙지구대장은 “추석 연휴 기간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강·절도 예방 및 교통사고 방지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경찰 불법촬영 캠페인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5일 롯데마트 남원점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OUT 캠페인’과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적등록제’를 실시했다.

불법촬영 OUT 캠페인에서는 시민 참여형 OX퀴즈를 통해 불법촬영이 범죄이자 신상정보공개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홍보하고, 간이점검 카드를 배부해 불법촬영 의심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촬영 기기 발견시 대처방법 및 신고절차 등을 안내한 후, 탐지기를 활용하여 시설 내 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유무를 점검했으며,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적등록제’와 관련한 제도를 홍보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한지, 판로 개척 효과 ‘톡톡’

전주교육청·신협·전북은행·전북대 등 구매처 확산

전주시가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전통한지 판로개척 활동이 구매처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전통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금융권, 종교계 등을 대상으로 전주한지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올해 전통한지 46만 3000장(A4용지 기준)을 판매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시가 올해 목표했던 60만장의 76%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그간 전통공예 분야 등 일부에 국한됐던 전주전통한지의 수요처가 전주시가 꾸준히 펼쳐온 홍보 및 판로개척활동을 통해 전주교육지원청과 재향군인회, 신협, 원불교, 전북은행, 전북대학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금융권, 종교계, NGO 등으로 다변화됐다.

대표적으로 시는 전통한지를 활용해 고서 및 중요서신에 대한 복본사

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교육청·신협중앙회·전북대학교·원불교 등에서는 수료증과 임용장 등 제작 시 전통한지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북은행은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아 전주한지로 기념책자를 제작하고, 재향군인회는 전주한지로 만든 수의를 제작·사용기로 했다.

여기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최근 20가구를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집고쳐주기 사업 추진시 친환경 전주한지벽지와 한지장판지를 구매해 사용기로 하면서 전통한지 판매역역이 기능성 한지제품까지 넓어지게 됐다.

시는 전통한지 사용처가 다변화되고 한지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존성과 기능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원자재비 상승으로 중국과 태국 등 외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리면서 수익성 악화 등 어려움을 겪어온 한지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전통한지 판로 확대를 위해 전북대학교병원과 예수병원, 도내 공설장례식장, 남원·군산·임실의료원, 수도권 직영 공설장례식장 등을 대상으로 통한지수의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전통한지 수요는 전주한지장이 좁아지는 형태로 줄이를 떠서 수의디자인 업체에 납품해 제작되며, 한지수의 1벌 당 A4 크기 전통한지 약 550여장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품질보증은 한지 인증기관인 전주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전통한지의 보존과 전통을 계승해나가고 있는 한지장인들은 전주한지산업발전에 소중한 분별”이라며 “이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하나하나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한지 판로확보 노력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지검, 음주운전 사고낸 국립대 교수 약식기소

전주지검은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등)로 전북 모 국립대 교수인 A씨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5월 21일 오전 0시 14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혀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교수는 음주 사고로 대학에서 맡고 있던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뉴스

전주시, 덕진예술회관에서 자립역량 교육

전주시가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저소득층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5일 덕진예술회관에서 희망 II·내일기움통장 가입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희망·내일기움통장 사업은 일하는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 매월 저축하는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주택구입, 임대, 교육, 창업 등 자활을 위한 목돈마련을 도와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교육은 희망 II·내일기움 가

입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연간 총 4회의 자립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김원규 서민금융진흥원 전문강사가 초청돼 행복한 삶을 위한 현명한 신용생활에 대해 강연했다.

주요 내용은 △대출과 신용 △현명한 대출 이용 △신용회복지원제도 △서민금융지원제도 등이다. 또, 특강 전에는 가입자들이 통장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과 해지 시 증빙서류 등에 대해 안내도 이루어져 가입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도 제공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행안부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

전주시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시정운영을 위한 정보공개 업무를 잘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45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 17개 교육청, 272개 공기업 등 577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 처리 시 △사전정보공표(공개 청구 전 국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보) △원문정보(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부단체장 이상 결재 문서를 원문대로 공개한 정보)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그 결과 시는 전체 평균점수(82.1점)보다 높은 총 86.8점을 획득해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전문가 24명과 일반 국민 14명 등으로 이루어진 ‘정보공개 평가단(평가단장 경진 서울시립대 교수)은 △사전정보공표 등록률 △원문정보 공개율 △고객수요 관리 등의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내리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정보공개업무 추진해온 지자체로 인정했다.

시는 향후에도 투명한 시정운영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사전정보공표 충실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청구처리 관리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전체 577개 평가대상 기관 중 전주시를 비롯한 111개 공공기관(19.2%)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우수 130개(22.6%), △보통 298개(51.6%), △미흡 38개(6.6%)로 나타났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예술교육도시 도약 자문단 구성

전주시가 미래주역인 어린이를 창의력과 상상력, 지식을 겸비한 인재로 키우는 예술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전문가, 지역 예술가, 교육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5일 팔복예술공장에서 교육전문가와 지역예술가, 예술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주시 예술교육 도시’ 자문단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예술교육도시 중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첫 번째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예술교육 도시 자문단은 예술이 일상화 되는 예술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전주 예술교육도시 종합계획수립’ 용역 수행기관인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의 연구용역 진행 상황 보고에 이어, 자문단의 의견제시와 질의응답,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

통과 동시대성이 공존하는 전주형 예술교육 모델 개발 △예술교육을 위한 인적자원 발굴 △팔복예술공장·한국전통문화전당·서학동 예술마을을 거점으로 한 예술교육 공간 조성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한 전주형 예술교육 모델 개발에 대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접근과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을 위해 팔복예술공장에 플랫폼 조성 △지역의 전통장인·예술인과 함께 예술교육 인적자원 발굴 △생태 숲 놀이터·책 놀이터·야호학교 등 놀이터를 비롯한 교육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 자문단 회의와 예술교육도시 연구 용역 결과물 등을 토대로 예술교육 도시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될 중기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